

 <b>한국소비자원</b> Korea Consumer Agency	<h1>보도자료</h1> <p>“소비자 주권 시대를 열어가는 국민의 기관”</p>	 페이스북 @kcanews  인스타그램 @kca.go.kr	
<b>이 자료는 2월 25일(금) 6시부터 사용하시기 바랍니다.</b>			
<b>배포일</b>	2022년 2월 24일(목) (총 9쪽)	<b>담당부서</b>  <b>담당자</b>	위해정보국 위해관리팀  김가영 팀 장 (043-880-5821) 박수경 과 장 (043-880-5823)

## 2021년 해외리콜 제품의 국내 유통, 전년대비 약 150% 증가

해외에서 리콜된 제품이 구매대행 및 오픈마켓 사이트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국내에서 유통·판매되고 있어 소비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 □ 지난해, 국내 유통이 확인된 382개 해외리콜 제품 판매 차단

한국소비자원(원장 장덕진)이 2021년 한 해 동안 중국·미국·유럽 등 해외에서 리콜된 제품의 국내 유통여부를 모니터링한 결과, 총 382개 제품이 확인되어 시정권고(판매차단·환급·폐기 등)했다.

382개 제품 중 국내 수입·유통업자가 확인되지 않은 377개 제품은 구매대행 사이트 등 제품 판매사이트의 게시물을 삭제하거나 판매를 차단했고, 국내 수입·유통업자가 확인된 5개 제품은 환급·교환 등을 권고하여 사업자의 자발적인 조치가 이뤄졌다.

\* Thule 텐트(회수 및 환급), Audio-technica 무선 이어폰(교환), Sportmix 개사료(재고폐기), Dexcom 연속혈당 측정기(표시사항 개선), Walrus Oil 가구 광택제(표시사항 개선)

### □ 주요 리콜 사유는 ‘유해물질 함유(음식료품)’, ‘부품탈락 및 질식위험(아동·유아용품)’, ‘과열·발화·화상 위험(가전·전자·통신기기)’ 등으로 확인

382개 제품을 품목별로 보면 ‘음식료품’이 158개(41.4%)로 가장 많았고, ‘아동·유아용품’ 51개(13.4%), ‘가전·전자·통신기기’ 44개(11.5%) 등의 순이었다.

품목별 리콜 사유를 살펴보면, ‘음식료품(158개)’은 유해물질 함유(56개, 35.4%)와 알레르기 유발물질 미표시 등 표시사항 미흡(41개, 25.9%)으로 인한 리콜이 많았다. 특히, 허용치를 초과하는 에틸렌옥사이드\*를 함유한 건강식품·식품보조제(24개)와 우유·땅콩·밀과 같은 알레르기 유발물질을 제대로 표시하지 않은 간식류 제품(18개)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 훈증처리 후 생성되는 잔류화합물로 의약품·의약품 등에 멸균 목적으로 사용되며, 우리나라에서는 식품 내 사용이 금지된 성분으로 국제암연구소(IARC)에서 발암물질로 지정됨.

‘아동·유아용품(51개)’은 제품의 작은 부품이 분리되어 영유아·어린이가 삼킬 경우 질식의 위험이 있어 리콜된 사례가 절반 이상(28개, 54.9%)이었다.

‘가전·전자·통신기기(44개)’는 과열·발화·화상 위험(22개, 50.0%)이 있거나 절연 미흡 및 감전 위험(12개, 27.3%)이 있어 리콜된 것이 많았다. 특히 내장용 배터리나 충전기 결합으로 화상·감전 위험이 있는 제품(13개)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 품목별 리콜사유 >**



한편, 제조국 정보가 확인되는 124개 제품\*을 살펴본 결과, 중국에서 생산된 제품이 49개(38.9%)로 가장 많았고, 미국산(31개, 24.6%), 영국산(10개, 7.9%) 제품이 뒤를 이었다. 품목별로 ‘음식료품’은 미국산(48개 중 18개, 37.5%)이, ‘아동·유아용품’(28개 중 22개, 78.6%)과 ‘가전·전자·통신기기’(17개 중 14개, 82.4%)는 중국산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 해외리콜 원문에 있는 정보를 바탕으로 제조국(원산지)을 확인할 수 있는 제품

**□ 해외리콜 정보 수집 확대 및 국내 유통 점검 강화로 적발 건수 증가**

’21년 해외리콜 제품의 국내 유통 건수는 382건으로 전년(153건) 대비 149.7% 증가했다. 작년 한 해 해외리콜 제품 유통이 이처럼 큰 폭으로 증가한 이유는 해외리콜 정보 수집을 확대하고 국내 유통 모니터링을 강화한 결과이다.

해외리콜 정보가 수집된 기관\*이 ’20년 19개에서 ’21년 27개로 확대되었고, 일본과 프랑스 리콜정보가 각각 523.1%, 322.2%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 해외 소비자정책 및 식·의약품, 농·수산물, 표준·품질 관련 정부 부처·기관 등을 상시 모니터링하고 실제 리콜정보가 수집된 기관 수

해외리콜 제품은 정식 수입사를 통한 유통보다는 국내 오픈마켓이나 구매대행 사이트 등을 통하는 경우가 많고, 한 판매처에서 판매가 차단된 제품이라도 다른 사업자나 판매 채널을 통해 다시 유통될 가능성이 있다.

이에 한국소비자원은 최초 판매차단한 제품에 대해 기존 3개월에서 1개월로 모니터링 주기를 단축하고, 재유통 점검횟수를 2회로 강화하였다. 재유통 여부 모니터링 결과, '21년 차단 조치한 해외리콜 제품 382개 중 15.1%(58개)가 다시 유통된 것으로 확인되어 판매차단을 권고했다.

## □ 해외위해 제품 차단 및 소비자 안전관리를 위한 사업자 협력 강화

온라인 거래 및 해외직구가 꾸준히 증가\*함에 따라 해외위해 제품의 온라인 유통 가능성이 계속해서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조성욱)와 한국소비자원은 5개\*\* 오픈마켓 사업자와 '자율 제품안전 협약'을 체결('21.4.) 하였다. 앞으로도 해외위해 제품의 국내 유입 및 온라인 유통·판매 문제를 신속하게 해결하기 위해 사업자의 자발적인 노력을 지속적으로 이끌어 나갈 예정이다.

\* 전년대비 온라인 쇼핑액(21.0%), 온라인 해외 직접구매액(26.4%) 증가 (『2021년 연간 온라인쇼핑 동향』, 통계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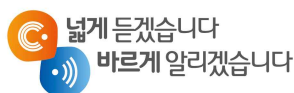
\*\* 네이버(주), 십일번가(주), (주)인터파크, 지마켓글로벌, 쿠팡(주)

### [ 자율 제품안전 협약 주요내용 ]

- ① 위해제품의 유통·판매 차단 및 차단된 제품의 재유통 방지
- ② 위해제품의 리콜이나 시정조치에 대한 소비자 정보 제공
- ③ 제품 안전 관련 정보 등을 게시하거나 공지하여 입점업체들의 제품 안전 관련 법령 준수 촉진
- ④ 위해제품을 반복적으로 판매하는 상습 위반 업체에 대한 조치방안 마련
- ⑤ 정부의 위해제품 통보 및 유통·판매 차단 요청을 위한 연락망 제공
- ⑥ 위해제품에 대한 유통·판매 차단 요청 시 위해제품 목록 신속히 삭제
- ⑦ 위해제품을 구매한 소비자의 안전 확보를 위해 정부와 협력범위 사전 협의
- ⑧ 정부의 위해제품 관련 요청사항 및 제품안전 확보를 위한 조치 성실 이행

아울러 소비자들에게는 해외제품 구매 전 리콜된 제품인지 아닌지 반드시 확인할 것을 당부했다. 리콜제품 정보는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www.ciss.go.kr) 또는 소비자 24(www.consumer.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 누리집(www.ciss.go.kr): 분야별 위해정보 - 위해정보 처리속보  
 소비자24 누리집(www.consumer.go.kr): 상품·안전정보 - 위해정보 처리속보



위 자료를 인용하여 보도할 경우에는  
 출처를 표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www.kca.go.kr



< 붙임 >

**1 해외리콜 제품 국내 유통 모니터링 결과**

□ '21년 시정조치된 해외리콜 제품, '음식료품'이 41.4% 차지

- '21년 한 해 동안 한국소비자원이 국내 유통을 차단한 382개 해외리콜 제품은 '음식료품'이 가장 많았고(158개, 41.4%), '아동·유아용품'(51개, 13.4%), '가전·전자·통신기기'(44개, 11.5%) 등의 순으로 나타남.
- '20년에는 '음식료품'(35개, 22.9%), '아동·유아용품'(34개, 22.2%), '화장품'(20개, 13.1%) 등의 순이었음.

< 해외리콜 시정조치 제품 품목별 현황 >

(단위: 개, %)

'20년 해외리콜 품목		'21년 해외리콜 품목	
품목	개수	품목	개수
음식료품	35 (22.9)	음식료품	158 (41.4)
아동·유아용품	34 (22.2)	아동·유아용품	51 (13.4)
화장품	20 (13.1)	가전·전자·통신기기	44 (11.5)
가전·전자·통신기기	19 (12.4)	화장품	42 (11.0)
생활·자동차용품	19 (12.4)	생활·자동차용품	30 (7.9)
스포츠·레저용품	11 (7.2)	의류·패션용품	28 (7.3)
의약품·의약외품·의료기기	7 (4.6)	의약품·의약외품·의료기기	16 (4.2)
기타	8 (5.2)	스포츠·레저용품	6 (1.6)
-	-	기타	7 (1.8)
<b>계</b>	<b>153 (100.0)</b>	<b>계</b>	<b>382 (100.0)</b>

□ '유해물질 함유(음식료품)', '부품탈락 및 질식위험(아동유아용품)', '과열·발화·화상(가전·전자통신기기)' 등으로 인해 주로 리콜

○ 상위 3개 품목의 주요 리콜사유를 살펴본 결과, '음식료품'(158개)은 유해물질 함유로 인한 리콜이 35.4%(56개), 알레르기 유발물질 미표시 등 표시사항 미흡으로 인한 리콜이 25.9%(41개)로 나타남.

- 음식료품 중에서는 에틸렌옥사이드가 함유된 건강식품·식품보조제(24개)와 우유·땅콩·밀과 같은 알레르기 유발물질을 제대로 표시하지 않은 간식류 제품(18개)이 많이 리콜된 것으로 나타남.

○ '아동·유아용품'(51개)의 경우 작은 부품이 탈락해 아이가 삼킬 경우 질식할 위험이 있어 리콜된 경우가 54.9%(28개)로 가장 많았고, 설계결함(8개) 및 유해물질 검출(7개)로 리콜된 경우가 각각 15.7%, 13.7% 등의 순이었음.

- '설계결함'에서는 배터리단자함 고정미흡 및 단추형 전지 삼킴 위험이 있어 리콜된 제품이 5개로 가장 많았고, 길이가 부적절해 질식위험이 있는 치발기, 구멍 크기가 부적합해 손가락 끼임 위험이 있는 유아 키보드 등이 있었음.

- '유해물질 검출'에서는 디에틸헥실프탈레이트(DEHP)\*가 과다 검출된 장난감(3개), 니트로사민\*\* 중독 위험이 있는 풍선(1개), 카드뮴 과다 검출된 유아 목걸이(1개) 등이 있었음.

\* DEHP: 폴리염화비닐(PVC) 제품 제조 등에 사용되며, 호흡·섭취·접촉 등을 통해 몸에 흡수될 경우 생식기능 장애 등 내분비계에 영향을 미치는 환경 호르몬

\*\* 니트로사민: 육류 가공품, 화장품, 고무제 등에서 검출되며 국제암연구소(IARC)와 미국환경보호청(EPA)에서 발암물질로 분류

○ '가전·전자·통신기기'(44개)의 주요 리콜사유로는 과열·발화·화상 위험이 50.0%(22개), 절연 미흡으로 인한 감전위험이 27.3%(12개)를 차지함.

- 내장용 배터리나 충전기 결함으로 인한 화상·감전 위험이 있는 제품(13개)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남.

< 품목별 리콜사유 >



□ 124개 제품 중 '중국산'이 38.9%(49개) 차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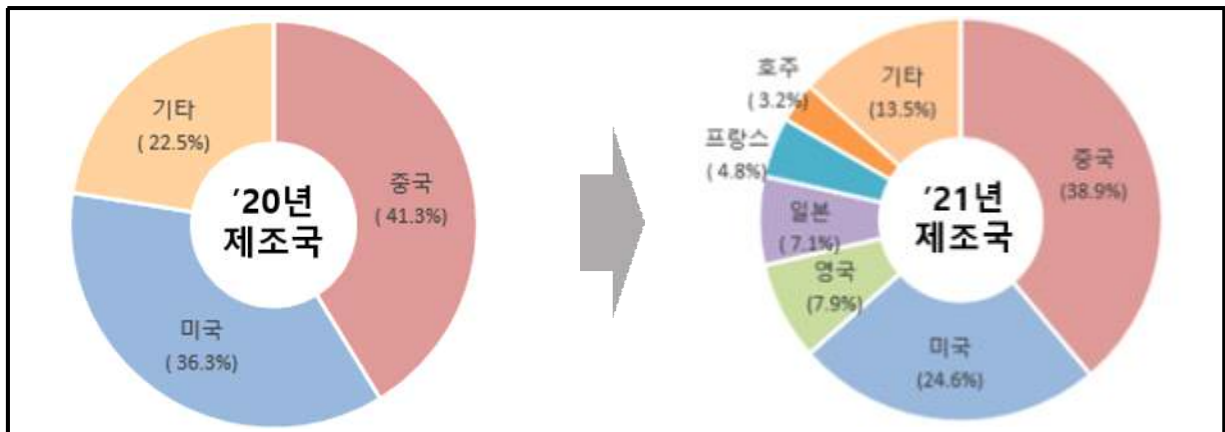
○ 해외리콜 제품 382개 중 제조국 정보가 확인된 124개\* 제품 가운데 중국산이 38.9%(49개)로 가장 많았고, 미국산이 24.6%(31개)로 뒤를 이었음.

\* 해외리콜 원문에 있는 정보를 바탕으로 제조국(원산지) 확인이 가능한 제품 수. 이 중 2개 제품의 원산지가 2개 국가인 것으로 파악됨(중국 및 미국, 중국 및 대만)

- '20년'에도 중국산 41.3%(33개), 미국산 36.3%(29개) 순으로 '21년과 국가 순위가 동일함.

\* 제조국 확인이 가능한 총 제품 수 80개

< 해외리콜 시정조치 제품 제조국별 비율 >



○ 제조국이 확인된 124개 제품을 확인한 결과, '아동·유아용품(28개 중 22개, 78.6%)'과 '가전·전자·통신기기(17개 중 14개, 82.4%)'은 중국산이, '음식료품(48개 중 18개, 37.5%)'은 미국산이 가장 많았음.



### < 품목별 제조국 현황 >

(단위: 개, %)

품목	제조국 구분			계
	중국	미국	기타	
아동·유아용품	22 (78.6)	-	6 (21.4)	28 (100)
가전·전자·통신기기	14 (82.4)	1 (5.9)	2 (11.8)	17 (100)
의약품·의약외품·의료기기	3 (50.0)	-	3 (50.0)	6 (100)
스포츠·레저용품	2 (66.7)	-	1 (33.3)	3 (100)
음식료품	1 (2.1)	18 (37.5)	29 (60.4)	48 (100)
생활·자동차용품	7 (41.2)	8 (47.1)	2 (11.8)	17 (100)
화장품	-	2 (40.0)	3 (60.0)	5 (100)
기타	-	2 (100.0)	-	2 (100)
<b>계</b>	<b>49</b>	<b>31</b>	<b>46</b>	<b>126*</b>

\* 원산지 확인이 가능한 제품 124개 중 2개 제품의 원산지가 2개 국가(중국 및 미국, 중국 및 대만)임.

- '아동 유아용품(28개)'은 중국산(22개) 다음으로 프랑스(2개), 영국(1개), 독일(1개) 등 유럽산이 14.3%를 차지했고 기타 원산지로 태국 및 콩고민주공화국이 있었음.
- '의약품 의약외품 의료기기(6개)'는 중국산과 이탈리아산이 각각 3개씩이었음.
- '음식료품(48개)'은 미국산이 18개(37.5)로 가장 많았고, 영국산(9개), 일본산(7개), 호주산(4개) 순으로 많았음.
- '화장품(5개)'은 미국에서 제조된 제품이 2개(40.0%)였고, 프랑스, 일본, 콜롬비아에서 제조된 제품이 각 1개씩 있었음.

## 2 판매차단 제품 재유통 여부 모니터링 결과

### □ 기 판매차단 382개 제품 중 58개(15.1%) 제품 재유통

- 국내유통 중인 해외리콜 제품에 대해 판매차단 조치 후 1개월과 4개월이 지나 재유통 여부를 살펴본 결과, 58개\* 제품이 시장 내 재유통·판매되는 것으로 확인되어 판매차단을 권고함.

\* '21년 12월 말까지 판매차단한 제품에 대해 '22년 1월 31일까지 재유통 여부 모니터링 후 조치한 총 건수(한 개 제품이 다수 판매사에 유통된 경우 포함)

### □ 재유통 여부 모니터링 강화

- 해외리콜 제품은 글로벌 온라인 유통사를 통해 구매대행 형태로 유통·판매되므로 이미 판매차단된 제품이 다른 사이트를 통해 다시 유통될 가능성이 있음.
- 해외리콜 제품의 국내 유통 원천차단을 위해 재유통 점검 주기를 단축 (3개월 → 1개월, 4개월)하고, 모니터링 횟수(1회 → 2회)를 늘리는 등 유사·동일 제품의 재유통 여부를 확인하고 추가 조치함.

## 3 사업자 협력을 통한 위해 제품 안전관리 강화

### □ 오픈마켓 사업자 자율협약 체결을 통한 위해제품 효과적 차단 도모

- 위해제품의 온라인 유통 및 재유통을 효과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5개 오픈마켓 사업자\*들과 자율 제품안전 협약을 체결(21.4.)하였고 협력을 강화함.

\* 네이버(주), 십일번가(주), (주)인터파크, 지마켓글로벌, 쿠팡(주)

#### [ 자율 제품안전 협약 주요내용 ]

- ① 위해제품의 유통·판매 차단 및 차단된 제품의 재유통 방지
- ② 위해제품의 리콜이나 시정조치에 대한 소비자 정보 제공
- ③ 제품 안전 관련 정보 등을 게시하거나 공지하여 입점업체들의 제품 안전 관련 법령 준수 촉진
- ④ 위해제품을 반복적으로 판매하는 상습 위반 업체에 대한 조치방안 마련
- ⑤ 정부의 위해제품 통보 및 유통·판매 차단 요청을 위한 연락망 제공
- ⑥ 위해제품에 대한 유통·판매 차단 요청 시 위해제품 목록 신속히 삭제
- ⑦ 위해제품을 구매한 소비자의 안전 확보를 위해 정부와 협력범위 사전 협의
- ⑧ 정부의 위해제품 관련 요청사항 및 제품안전 확보를 위한 조치 성실 이행

- 해외리콜 정보를 바탕으로 국내 유통 사실 확인 시 오픈마켓 사업자에게 관련 내용을 공유하고 해당 제품이 즉시 판매차단 되도록 조치함.

### □ 리콜정보 수집 및 공개

- 유럽, 북미, 중국, 호주 등 주요 지역 및 국가의 식품제품 안전 유관 기관 사이트 29개를 상시 모니터링하고 해외리콜 정보를 수집하여 국내 유통을 차단하고 있음.



**< '21년 해외리콜정보 주요 수집 국가 및 기관 >**

구분	국가	기관(사이트)명	구분	국가	기관(사이트)명
1	유럽 연합	EC(Safety Gate)	6	호주	ACCC, TGA 등
2	미국	CPSC, FDA, USDA 등	7	프랑스	Rappel consommateur 등
3	캐나다	Health Canada 등	8	독일	BAuA
4	영국	CTSI, FSA	9	중국	DPAC
5	일본	METI, CAA, NITE 등	10	뉴질랜드	FSAZN, MBIE 등

\* 상기 기관을 포함하여 **총 29개 기관**의 리콜정보 모니터링 중('22.1. 기준)

- 해외에서 리콜된 제품 정보와 국내 유통이 확인되어 조치한 결과는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www.ciss.go.kr](http://www.ciss.go.kr))과 소비자24([www.consumer.go.kr](http://www.consumer.go.kr))에서 확인 가능함.

누리집	리콜 정보 게시	조치 결과 게시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	위해정보 알림 - 해외리콜 수집정보	분야별 위해정보 - 위해정보처리속보
소비자24	상품 안전정보 - 해외리콜	상품 안전정보 - 위해정보처리속보